

#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 I. 서론

1. 2008년 도입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제도는 2017년 제3차 주기에 접어들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라면 예외없이 유엔의 3대원칙 중 하나인 인권에 대한 상호 점검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국 정부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또 2016년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UPR제도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가장 중추적인 제도로 확립되어 온 것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향후에도 국제적 인권보호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2. 2017년 5월 9일 출범한 새 정부는 인권보장을 국정 의 핵심가치로 삼고, 인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7월 19일 발표하였다. 국정과제에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강화, 국민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사회 제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노동·사회보장·교육권·건강권 강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의 민주주의 및 인권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되었다. 정부는 8월 현재 이러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3. 2012년 10월 제2차 UPR심의 이후, 정부는 최종보고서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UPR권고를 개별 정책과제로 수용하기 위해 부처별 검토 후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영하였다.

## II. 보고서 작성방법 및 협의 절차

4. 이 보고서는 12개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무부가 총괄하여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단체 대표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제2차 UPR심의의 권고 이행상황과 시민사회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보고

서 초안을 게시하여 일반 시민의 의견수렴도 병행하였다. 시민사회 및 일반 시민 의견 중 일부는 국가보고서에 반영하였고,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다.

5.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이후 정부는 총 70개 주제로 정리된 권고 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기 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권고 수용여부를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2014년 1월 시민단체가 제안한 UPR권고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2014년 11월 제시하였고, 이후 2015년 3월에는 이 의견서를 토대로 10개 정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10개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가 모여 권고 이행상황과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6. 정부는 이 결과를 통해 정리된 제2차 UPR권고 이행상황 중간보고서를 2016년 2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도 UPR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토론회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등 우리 사회 내에서 UPR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한층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권고 15)

### III. 제2차 UPR 권고사항 이행

#### A. 국제인권규범의 수용과 제도적 차원

7. 대한민국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4개 조약의 개인진정절차도 수용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새로 설립된 인권이사회에 초대 이사국으로 입후보할 때 약속한 바대로 2008년 모든 주제별 특별절차에 대해 상시초청을 허용한 이후 2011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3년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2014년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2015년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2016년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등 특별절차의 국가방문을 수용하여 진술하고 건설적인 상호대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강제실종실무그룹의 제111차 정례회기를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지원하였다. (권고 16, 중간보고서 참조)
8. 현재 비준하지 않은 조약 중 강제실종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경우에는 구금시설의 범위에 대한 정의 등 국제적 기준과 국내기준을 비교 연구하여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범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권고 1, 2, 3, 4, 6)

9. 이주노동자협약과 가사근로자협약은 검토 결과 현 상황에서는 국내법과 불합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경우는 사형제에 대한 존폐여부에 대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즉시 비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ILO의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강제근로 금지에 관한 4개의 경우는 국내법과 다소 불일치하거나 행정관행 등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운영되어 비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7년 출범한 새 정부는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노사관계를 포함한 노동관련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며 특히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핵심협약 비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고 1, 5, 7, 35)
10. 아동권리협약 제21조(a) 입양에 관한 조항은 관련 국내법제 정비가 이루어져 유보철회를 위한 부처협의를 실시하였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관련 상법 제732조는 2014년 3월 개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여전히 장애인권리협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유보철회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sup>1)</sup> (권고 10, 11, 12)
11.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청사진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12년~2016년의 제2차 계획이 종료되었고, 현재 새 정부의 인권정책기조와 국정과제를 반영한 제3차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받는 절차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거쳤고, 향후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외부자문기구를 2013년 시민사회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구성하였다. (권고 15)
12.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견에 관한 책임면제 등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2016년 2월 개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천

---

1) 다른 국제인권조약 가입이나 유보에 관한 정부입장은 한국정부의 중간보고서 2쪽~8쪽을 참고바람

기관에 권고하였으며, 위원의 공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 시민으로부터 적격자를 추천받아 위원추천권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원구성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권고 14)

13.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는 아동권리를 전담하는 부서인 아동청소년인권팀이 2014년 8월 신설되었고, 이어 2016년 5월 아동권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독립적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한편 정부는 2013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재개하였고 이후 계속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동에 관한 정부 전체의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권고 17, 18, 19)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국제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 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2015년 ODA 총액은 19.2억불, GNI대비 0.14%에 해당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 평균 10.2%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2020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통하여 GNI대비 ODA규모를 2020년까지 0.2%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DAC회원국 평균 수준인 0.3%로 규모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권고 70)

## B. 평등 및 비차별 원칙

15. 대한민국의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90여개의 개별법령에서는 다양한 영역, 사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도 허용될 수 없다. 정부는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기 위해 2006년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하여 연구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2007년 정부가 제출한 법안 및 이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입법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2013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의 세부목표로 선정하고, 제정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해외입법례와 적용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성적 지향 등 차별금지 사유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으로 인하여 현재도 입법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 및 국민의견수렴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권고 21, 22, 23, 24, 30, 33)

16. 정부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성 주류화로 바꾸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통계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정책 조정, 협력, 실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ODA)에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추진과정에서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신설하였다. (권고 25, 26)
17.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면서 이를 위한 이행법률로서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방송매체에서의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특정 인종을 조롱·모욕하는 표현을 심의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상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적 표현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법률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사 자체의 자율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권고 30)
18.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이 아닌,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기강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현재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그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 중이다. (권고 34)

## C.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 생명·자유 및 안전권

19.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로써 사형제를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여론과 법감정, 사회현실,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현재 사형을 최고형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는 형벌 체계 전체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사형제 폐지 여부 또는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지 여부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다.(권고 35)
20.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노인들의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던 맹독성 농약(그라목손)의 생산·유통 금지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국 241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자살고위험군 상담·지원, 24시간 전화상담체계 운영,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부터는 지자체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1.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형법」 및 특별형사법에 따라 처벌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 등을 당한 사람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조사, 직권조사, 방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문행위에 대한 독립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을 2007년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변호인 참여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검찰청, 경찰청, 군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하여 직무 특성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권고 3, 13, 16, 37)
22. 또한 경찰은 평화적 집회는 보장하되, 폭력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 상황별 유의사항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1월 집회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2016년 9월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인권중심의 경찰개혁을 위하여 시민단체 활동가 및 교수 등 외부 민간전문가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산하에 ‘경찰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과거 경찰의 집회

시위대응과정 및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그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와 관행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권고 36)

23. 지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특별법이 2014년 제정,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지뢰피해자는 의료지원금, 위로금 등을 지급받고 있으며, 2017년 2월까지 접수된 총428건의 피해접수에 대해 135건을 심의하여 80명에게 47억여 원의 의료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현재 293건은 조사심의 중이며 55건은 기각되었다. (권고 44)

- **사생활, 혼인과 가족생활**

24.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기초 제도로써 유지될 필요가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던 기존 법률에 대해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 또한 2016년 3월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하여 개인정보 삭제·차단조치를 강화하고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증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유형을 구체화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환수를 위하여 몰수·추징을 도입하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2016년 개정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엄격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민감한 개인위치정보 사업자의 직원까지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하는 등 ICT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대책을 한층 강화하였다.
26. 정부는 2013년 가정폭력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 확대, 가정폭력 추방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을 배가하였으며, 각급 경찰

서에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규정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하였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정부는 젠더폭력 방지와 관련하여 보다 포괄적·근본적인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고 27, 39)

• **기본적 자유: 종교·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27.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현실, 병역의 형평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종교 등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안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하였고 국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관련 부처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권고 53)
28. 보안관찰제도는 내란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시 보안관찰처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정부는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인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실질적 심사,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등 재범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엄밀히 하여 보안관찰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권고 58)
29.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남용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동법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인원은 2012년 26명, 2013년 38명, 2014년 7명, 2015년 26명, 2016년 21명에 불과하다. (권고 54, 55, 56, 57번)
30.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는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한 보장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



의 삭제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침해를 받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44조의7은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 등을 신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 중이다. (권고 50, 51)

#### D.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 조건

31. 정부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여성의 고용률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직무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2009년부터 저소득층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2013년 개정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으며, 중장년층의 신속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고 60)
32. 최저임금제도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기업,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그 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년부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고 있고, 최근 7~8%의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으며 2017년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33. 한국의 고용시장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문제로서, 정부는 2011년에 이어 2014년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2.4%에 해당하고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짧은 근속기간 등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향상,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퇴직급여 적용 확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 유도,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고, 일용직이나 용역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과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증가 추세이며, 정규직 대비 임금비중도 2011년 61.3%에서 2016년 66.3%로 상승하였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비용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할 계획이다.

34.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률에 따른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형태, 사용자 종속정도 등이 다양하여 법원이 개별·구체적 사안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왔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직종에 따라 사업주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있어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구체화, 약관법 적용, 산재보험법 특례적용 등의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으며, 이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노사정 및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보호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사회보장권 및 적절한 생활에 대한 권리

35.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부양능력 판정 기준 완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15년에는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제도를 개편하여,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여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지원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 중 자녀 사망시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을 완화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시에는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하였다. 각종 급여 중 교육급여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권고 59, 60)

36.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있어 탈빈곤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잠재빈곤층 발굴 및 지원, 기초연금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빈곤감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근로와 연계한 복지에 방점을 두어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699만명의 65.6%에 해당하는 약 458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권고 59)
37. 정부는 공공주거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3.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고,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으로 2017년까지 15만호 공급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 사업도 도심형, 토지임대방식, 협동조합 연계, 한옥뉴스테이 등 다양한 사업주체, 주택유형, 택지 등을 활용한 특화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를 확대, 강화하여 주거비 지원을 실질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으로, 2016년 말 기준, 주거급여로 최대 81.1만 가구에 월 평균 11.1만원의 임차급여 지급 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였다. (권고 61)

#### • 건강권

38.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62%에서 2014년 63.2%, 2015년 63.4%로 다소 상향되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관해서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2014년~2018년 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여 생애주기별 핵심적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 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라는 3대 방향, 32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장애인 보장구의

확대 및 기준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고, 휴대용 산소치료나 호흡보조기 등에 대한 요양비 적용을 확대하는 등 필수 재가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소득계층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권고62)

39.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위주에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사회복귀 지원 강화, 국민 모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정신건강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2016. 5. 29.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7. 5. 30. 시행되었다. 법 개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강제입원 요건과 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환자의 인권 침해도 최소화하게 되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등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복지서비스 지원이 강화되었다.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시설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고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 • 교육권

40. 대한민국의 학생 취학률은 2016년 기준 유치원 50.7%, 초등학교 취학률 98.1%, 중학교 취학률 94.9%, 고등학교 취학률 94.1%, 전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8.5% 수준이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시행 중이며, 향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41.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대학등록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였다. 2012년 국가장학금 지급 지원 사업을 도입하였고, 2015년에는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원 장학금 3조 9천억 원과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자체적 노력으로 마련한 3조 1천억 원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하였다. 2017년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 차등지원하는 유형과 대학자체의 등록금 경감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유형, 다자녀대상 장학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2.5%로 물가상승률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서, 대학등록금 경감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고 있다. (권고 63)

## E. 여성 및 아동의 권리

42.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되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전환되도록 하였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5년 주기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정부기관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등 8개 분야,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권고 26, 27)
43.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이 2016년 이루어졌다. 또한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캠페인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청소년 부 또는 모에게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학업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학원비 등 학업지원, 자립촉진 수당 지급 등 한부모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위하여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이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4년 제정하였고 2015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고 28)
44. 고용 및 노동시장 여성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하고 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재택·원격근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2014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되었고,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아빠의 달’을 도입하고 같

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다. (권고 26, 48)

45.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상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원칙적으로 차별행위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주 이외의 자가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고 있다. 성희롱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고 49)
46. 정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2012년 12월 폐지되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도 우편고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으며,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였다. 성폭력 사건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2012년 도입하였으며 2013년부터 모든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권고 39, 40)
47.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도입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3년부터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장의 기준을 업종 평균 여성근로자비율 대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하였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제를 도입하고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후 해당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비율이 2015년 36.4%, 2016년 37.3%,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5년 15.9%, 2016년 16.4%로 상승하였다. 정치영역에 있어서는 여성의원 공천 할당제를 도입하여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 중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이 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제16대 국회에서 5.9%에 불과했던 여성의원 비율은 제17대 13.0%, 제18대 13.7%, 제19대 15.7%, 제20대 1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48. 무력충돌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서 「병역법」을 개정하여 18세 이상의 남성만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있고, 병역의무자인 남성은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을 받은 남성은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5세 미만인 사람을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고 20)
49.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하고, 전문적 교육을 받은 특수교사를 증원하였다. 또한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해 전체 장애학생 중 평균 70.4%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며,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을 위하여 전문 기숙형 치료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2012년 설치하였고, 정서 행동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보호, 자립, 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권고 19)
50.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아동의 출생시 출생신고의무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본국법에 따라 출생등록이 가능하다. 난민 등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출생신고 의무자가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6년 5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권고 29)
51. 아동의 입양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철회를 위하여 정부는 2011년 8월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고, 요보호아동의 입양 시 국내외 입양 모두 법

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 2월에는 「민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의 입양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2013년 「가사소송법」에 관련 절차를 도입하였다. 또한 가정법원이 입양의 허가 심판재판을 하는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이익과 의견을 존중하는 절차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2013년 5월 서명하였으며, 이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률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호에 대한 유보철회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유보철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2016년 12월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입양특례법상 입양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입양전 부모교육을 민법상 입양시에도 실시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입양허가 전에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적 특성 및 효과적인 양육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입양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양부모와 입양아동이 새로운 가족관계에 적응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였다. (권고 10, 47)

52. 아동에 대한 학내 체벌을 금지하기 위하여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제한근거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 동행출동 근거도 마련되었다. 2015년 ‘범부처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가 구성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2016년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올바른 부모교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여 아동학대 내용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며, 아동학대 예방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권고 17, 38, 40, 41)

53. 아동성폭력 예방 조치 및 교육을 강화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성인권교육 및 직장 내 성범죄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경찰 및 검찰에 성폭력사건 전담 수사팀 및



검사를 지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성·아동범죄 수사전문가과정 워크숍을 매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인제도와 진술조력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하여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에게는 15년 범위 내에서 성충동약물치료도 실시하고 있다. (권고 41)

54. 아동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국선보조인제도,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년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9세 이상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다. 소년원은 소규모 거실로 개선하고, 가족간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 소년 수용자의 대학 진학 및 직업훈련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소년법에 대해서는 구금에 대한 대안처분으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결정,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대안처분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2014년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징계대상 행위 조사 시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실무상 처우심사위원회의 회의 시 진술기회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입양에 대한 결정 등에 있어서 법원은 13세 이상인 아동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향후 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사사건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권고 45)
55. 정부는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위하여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다. 2013년 개정에 따라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국외이송 목적” 외에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등 약취, 유인 행위에 대한 목적 규정을 두었고, 인신매매의 결과적가중범을 상해와 치상, 살인과 치사 등으로 구분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기존에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이 국내에 있을 때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보편적 관할권 규정을 도입하

였다. 이후 정부는 인신매매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2015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였고, 2015년 12월 5일 위 의정서는 대한민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권고 42, 43)

## F. 소수자 권리

56.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현재 이행 중인 제2차 기본계획은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한편,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문화다양성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의 전체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별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권고 31, 32, 46, 69)
57.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은 고용허가제의 성격상 전면 폐지는 어렵지만,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인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사업장 이동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장 이동 허용 변경횟수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최저임금법」 위반사항 및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의 사업장변경을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2016년 개정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권고 65)
58.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차별 없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향유한다.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다르지 않다고 판결하였고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설립된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한 고충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입국 후 3개월 이내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해소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며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민과 같이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가입되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의 적용을 받으나 반환일시금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비하고 안정적 귀국과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지원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매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약 3000개소 중 30% 이상을 농축산업 사업장에 할당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노동권 및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농축산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배포하고 있다. (권고 67)

59.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위해 2006년 설치된 이주여성긴급지원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13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4월부터는 다누리 콜센터를 통해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폭력 피해에 대한 긴급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에서는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담·의료·법률·출국 등을 지원하고 있고 평균 보호 인원은 2008년 17명에서 2016년 271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특칙을 마련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및 기타 폭력을 당한 외국인 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사법절차에 호소할 수 있도록, 이들이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권고 39)

60.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국가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불법체류 아동들도 만 12세 이하인 경우 총 17종의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건강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경우 1회 500만 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 진료도 지원한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자체적으로 부모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며,

만0세~만2세의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고 66)

61.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의해 난민인정절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난민인정절차에서는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면접과정에서 통역의 도움을 받을 권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시리아 내전 상황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부터 시리아 출신자는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여 보호하고, 2015년부터는 3개년 계획으로 재정착 난민을 시범수용하고 있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정착 난민 수용의 정식사업 전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고 68)

62. 또한 난민신청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생활 등 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난민인정자에게는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사회적응교육을 제공하고 배우자의 입국을 허용한다. 난민을 포함한 모든 국내 등록 외국인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주민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고 64, 68)

#### IV. 자발적 권고의 이행 및 세계인권증진을 위한 기여

63. 2015년 유엔인권이사회에 이사국으로 입후보하면서 제출한 자발적 권고에 관한 내용은 제2차 UPR 심의의 권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내용은 제3장에서 다루었다.

64. 우리 정부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내적·국제적 약속과 함께 인권이사회 활동에 대한 기여 의지를 담은 자발적 공약을 제70차 유엔 총회에 제출하였다. 자발적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2016~2018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세계 곳곳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인권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제24차 인권이사회부터 1~2년마다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를 상정하며, 지방정부의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최경림 주제네바대사가 인권이사회 의장을 수임하며, 인권이사회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권이사회 차원의 논의에 기여하였다.

65. 한편,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 기구의 이사국 및 위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와 여성지위위원회의 이사국 및 위원국으로서 양성 평등 증진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유엔 아동기금(UNICEF) 집행이사국으로서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주유엔대사가 2015~2016년 임기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의장을 수임하며 장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다.

## V. 새로운 쟁점 관련 진전 상황 및 문제

66. 유엔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규범이 형성되면서 우리 정부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되어 있던 NCP가 실질적으로 기업인권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접수받은 경우, 기업측과 노동조합측간 당사자 면담주선 등 중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2013년 NCP 구성을 개편하여, 정부와 CSR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였고, 2017년부터는 노동 및 중재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OECD 사무국에 동료평가를 받기로 신청하였다. 최근 NCP는 이의제기 사건 처리에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 면담주선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적절한 권고를 해왔으며, 향후에도 NCP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그 운영과정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과 NAP 지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반영하여 정부는 현재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검토 중이다.

67. 군대 내의 기본적 권리 침해 행위와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2015년 1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근거하여 주기적인 군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군인에게 다른 군인의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가혹행위를 신고한 군인을 보호함으로써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매년 1회 이상 인권실태점검과 국방인권협의회, 군인권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군인권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는 장병·부모·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방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여 병영 내 인권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부 내의 인권보장 정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군대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8. 한국은 2018년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비율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빈곤, 노인자살, 노인학대, 노인 상호간 부양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였으며, 2017년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또한,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 현재 약 44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방문, 전화, 택배 장비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녕을 확인하고, 2011년부터 민간결연을 맺고 안부확인 및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을 통해 사회관계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2004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명단공표, 취업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 상호간 부양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공적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공적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노인 상호간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